

시민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지원

무한경쟁에서 협력과 공유의 자영업 생태계로 전환

1. 현황과 특성

1) 현황과 특성

- 소상공인이란? (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)
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 - 그 외 도소매업 등의 기타업종 : 5인 미만

상시 종업원수	5인	10인	50인	300인
제조, 건설, 광업, 운수	소상공인		소기업	중소기업
서비스등 기타 업종	소상공인	소기업	중소기업	

>> 과다진입, 다산다사(多産多死) 등의 구조적 문제

- 창업생존률 : 3년후 53% → 5년후 39% → 7년후 29%
-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및 전직(轉職)지원 등 출구전략 부족
- 기존 지원정책은 경영혁신보다 시설위주 양적지원에 치중한 경향
 - 소상공인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지원전략 부족

>> 충남 소상공인의 현재

- 도내 전체사업체의 92.5%, 종사자의 39%를 점하여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핵심을 이루고 있음.
 - 사업체수 : 130,578개 (전국대비 3.9%)
 - 근로자수: 289,262명 (전국대비 3.8%)
 - 사업체 비중 : 생활형 서비스(도소매업, 음식숙박업 등)가 49.5%
- 충남 소상공인 사업체의 90.1%가 독립점(단독사업체)
 -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가맹점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점이 특징
 - 임대점포의 경우, 평균적으로 보증금 2,027만원, 월세 77만원을 지불
- 평균영업기간은 10.1년으로 전국평균 9.7년보다 높음
- 월평균매출액은 914만원(순이익 190만원)으로 전국 877만원(순이익 187만원)보다 높음.
 - 그러나, 영업이익률은 20.8%로 전국평균 21.3%보다 낮음
- 창업동기는 생계유지가 81.7%가 가장 많았고 성공가능성(13.9%) 가업승계(2.7%)가 그다음을 이음
 - 창업준비기간은 1~3개월 미만(26.4%)→ 1개월미만(21.3%)→ 3~6개월 미만(20.8%)로 6개월 미만의 짧은 준비기간을 갖는 비율이 70%에 육박
 - 창업관련 정보습득은, 없다(35.6%)→ 정부창업지원(32%)→ 관련업종협회 등(20.8%) → 친인척/친구 등(19.4%)으로, 50% 이상이 전문적 정보습득을 하지 않은채 창업
(특히 충남의 소상공업 창업자는 친인척/친구, 온라인 정보 의존률이 전국비율보다 높아, 창업컨설팅 필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)
 - 창업비용은 평균 7,977만원으로 전국평균 7,257만원보다 높음. 이 중,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74.2%.
- 지원정책 중, 자금지원에 대해 55.1%, 교육지원에 대해 83.3%, 창업컨설팅에 대해 84.9%가 모르고 있었음.
- 협회/단체 가입여부에 대해, 54.3%가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조직화에 대한 고려 필요

2. 대내외 여건

>> 법률적 근거

-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(법률 제11846호)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(법률 제 11847호)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 (법률 제 10599호)

>> 지원기구

- 중소기업청 : 중소기업청 내 소상공인정책국에서 정책수립, 지원, 시장상권, 사업조정 등의 업무 담당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 소상공인센터 : 민간부문 주도의 소상공인 지원,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, 일부자금을 제외하면,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
-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위탁기관 : 지자체의 자금지원 서비스

>> 정부의 소상공인 육성정책

정책분야	주요사업	사업내용
철저히 준비된 창업유도	업종별·지역별 과잉경쟁 완화	▶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▶과밀업종 정보제공 강화 ▶소상공인 종합지원시스템 구축(통합)
	소상공인 지원의 “선별과 집중” 강화	▶유망·신사업아이템 지원강화 ▶창조형 소상공인 우대(지원한도 확대 등)
	업종전환 및 재기지원 활성화	▶희망자대상 유망업종 전환교육 실시 ▶희망컨설팅 운영을 통한 수익성 개선
ICT·협업기반 골목상권 활성화	ICT를 활용한 유통체계 개선	▶골목슈퍼-지역농산물공급자간 온라인주문 및 일괄배송 공급시스템 구축
	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	▶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유도 ▶협동조합과 소비자단체간 연계판로 확보
	구도심 상권복원 프로젝트	▶중소도시 구도심 단계별 상권복원 추진
생업안전망 및 보호기반 확충	임차상인 보호제도 마련	▶영세임차상인 권리강화(표준계약서) ▶임대보증금 안심금융 신설 ▶정부지원사업 연계 임대료자율동결 확산
	소공인 특화지원 확대	▶소공인 현장애로 해결 ▶주요업종별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, 시행
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전통시장 육성	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확대	▶지역별 문화관광형 시장 확대 ▶팔도장터 관광열차운행 전면확대
	스마트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조성	▶ICT접목 확대를 통한 젊은층 유인강화 ▶문제해결형 컨설팅 실시 ▶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
	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	▶(청년층) 모바일상품권 출시 ▶(개인) 상품권 구매시 할인혜택 확대 ▶(중소·중견기업) 백만누리운동 전개 ▶(대기업) 구매실적 동반성장지수에 반영

>>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

- 육성사업 지원
 - 맞춤형 전문교육, 경영컨설팅, 협업마케팅,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설립지원, 우수 소상공인 육성의 5개분야에 2억5천만원 지원(2014년도)
 - 우수소상공인 육성분야는 충남경제진흥원 위탁
- 자금 지원
 -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운영주체로 충남도 소재 사업자등록의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.
 - 소상공인, 충남현 예비사회적기업 및 충남도 청년CEO교육수료자 등이 대상.
 - 지원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으로, 대출금리 일부를 도에서 이자보전 (1.75%~2%)
 - 지원기간은 보전금리에 따라 2~3년.
- 지원금액 규모 및 실행률, 지원건수 모두 증가추세

구 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.10	비 고
지원한도(억원)	1,000	850	850	1,250	1,450	
건 수(건)	2,755	2,250	3,075	5,635	5,272	
금 액 (억원)	553	449	633	1,250	1,409	
실 행 율(%)	55.3	52.8	74.0	100	97.2	

>> 충남도 및 시군 소상공인 지원관련 조례

- 도
 -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- 시군
 -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(천안, 아산, 논산, 당진, 부여, 홍성)
 -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(천안, 당진, 청양)
 -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(보령, 서산, 서천)
 -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(예산, 홍성)
 -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 -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
 -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
 - 청양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
 - 홍성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

3. 충남의 취약점 및 개선방안

- 협회/단체 가입여부에 대해, 54.3%가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조직화에 대한 고려 필요

>> 짧은 창업준비기간과 편협한 정보습득 루트

- 충남의 소상공인은 70%정도가 6개월미만의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창업.
- 창업관련 정보습득에 관해 특별히 없었거나 친인척/친구, 블로그 등 온라인 정보에 의존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
- 창업컨설팅 필요성이 높음

>>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부족

- 자금지원, 교육지원, 창업컨설팅에 대한 지원에 관해 50%이상, 많게는 80%이상이 모르고 있었음.
- 무조건적 지원은 지양하면서,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택과 집중형의 지원 필요

>> 조직화 유도

- 협회/단체 가입여부에 대해 50%정도가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다양한 성공사례 소개 및 조직화 과정에 관한 설명을 통해, 소상공인의 조직화에 대한 이해 제고

4. 미래 전략 목표 및 정책과제

>> 무분별한 생계형 창업 대신 준비된 유망창업을 유도하는 창업 컨설팅 강화

- 성장유망한 업종을 중심으로 평가, 지원, 관리 등 종합서비스 제공
 - 소상공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비용 등을 지원
- 기존 소상공인 정책의 창조경제화
 - 전통시장 ICT기술 접목 : 모바일 쿠폰, 스마트 결제 시스템 등
 - 소상공인 간 공동사업, 이업종 소상공인 간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
 - 예. 소상공인시장공단 소상공인 협업화사업
- 상권중심의 생태계 구축
 - 다수의 소상공인이 밀집한 곳을 상권전체가 융합된 하나의 조직체(기업)으로 취급. 상권내 사업체들 간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
 - 상권별 통계기반 구축 및 마케팅

>> 자영업 무한경쟁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, 협동조합 지원정책 도입

- ‘프랜차이즈형 사업자 협동조합’의 활성화
 - 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높은 협동이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
 - 소셜 프랜차이즈(자영업체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 프랜차이즈 본사기능 담당)
 - 예. 동네빵네 협동조합, 베비라협동조합, 카포스 협동조합, 와플대학, 주얼리 협동조합 등

>>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저임금 노동시장 개선을 통한 자영업 진입 억제

- 예. 개인사업에 대한 ‘전문자격제’ 도입 (2005년 시도)
 - 창업자금 지원시 반드시 컨설팅 및 교육을 받도록 유도
 - 지역신보 특례보증에서 창업자 지원비중 감축
 - 경쟁력 없는 점포는 컨설팅 후 퇴출과 업종전환 유도.
 - 프랜차이즈 협회를 통해 가입 알선. 건전한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해 ‘단체인증제’ 도입

5. 핵심사업 (2~3P)

>> 창업 이전 컨설팅 지원

- 초기 창업 자본 투자 이전에 창업적성검사, 지역 상권 분석 등 컨설팅 기능 강화
- 경쟁 과잉 분야 대신 틈새시장과 아이디어 유망 업종의 창업을 유도

>>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기업 지원

- 자금 지원이나 물리적 인프라 지원 위주에서, 소상공인들의 공동구매, 공동물류, 공동판매, 공동홍보 등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(사례 : 서울 동네빵네협동조합)

>> 지역대학과 결합한 충남 전통시장 변신 프로그램 추진

- 전통시장과 대학을 연계하여, 전통시장의 특성화, 문화관광 명소화 추진
- 대학생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 전통시장 경영 혁신 지원하고 참여 대학생의 청년상인 지원(사례 :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)

>>

-
-
-

6. 추진사업

>>

-
-
-

>>

-
-
-

>>

-
-
-

>>

-
-
-

>>

-
-
-

7. 벤치마킹 사례

■ Micro-Inno-Change 프로그램 (독일)

소상공인의 환경변화 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이라고 평가. MIC는 경영개선과 경영환경 예측, 성공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개념 및 모델개발, 시험을 위한 프로젝트로 2005년~2007년 시행.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및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목표로 함. ①퀵체크 환경 분석 ② 퀵체크 고객분석 ③퀵체크 공급자분석 ④퀵체크 경쟁자분석 ⑤퀵체크 재무분석 ⑥예측 계기 판 으로 구성되어 있음. 소상공인이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맞춤형 해결방안을 모색한 데에 의미가 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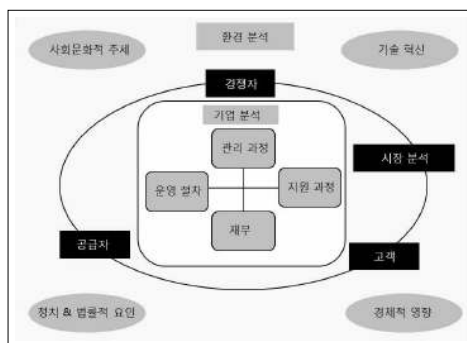
독일 외에도 네덜란드, 스페인, 이탈리아 4개국이 공동참여. 국가별로 업종별 상황에 맞도록 프로그램 지원내용 다양화.

■ 서울 동네빵네희동조합

NPO 인맥터스의 연세대학교 지부 학생들이 동네빵집들의 어려운 사정을 함께 타개하고자 2011년부터 활동 개시. 팸플렛, POP 등을 제작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마케팅을 담당.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준비하여, 2013년 6월 협동조합 설립. 9명의 조합원이 모두 관리, 생산, 품질, 영업, 대외 업무, 구매, 이사장 등 각자의 업무를 맡아 1인1표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협동조합 정신을 실천. 2014년말 현재 서대문구와 은평구 빵집 11곳이 참여 중.

■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

2011년 문화관광체육부 문전성시사업을 진행하여 하늘정원(남부시장6동 2층), 청년장사꾼만들기 프로젝트, 작가 레지던스, 시장문화행사 등 교육, 예술, 역사 등 문화적 기능을 확장. 약 20여개의 챌린지숍이 운영중. 문전성시사업에서 창업아이디어와 가능성을 보고 입주자를 선정하여 1년간 임대료 지원. 1인점포, 20대중반~30대초반의 청년사장들이 주를 이룸. 야시장, 벼룩시장, 밴드공연 등을 통해 젊은 층을 유인. 전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한옥마을과 더불어 전주시내관광의 필수코스로 자리매김 중.



자료) 김기희(2011) 대전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, 대전발전연구원 외 신문기사 등